

국정운영 5개년 계획 주요 국정과제

1. 일자리

□ 일자리 창출·유지

- 청년고용의무제 확대,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
- 중소기업에 한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지원
-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
- 희망퇴직 남용 방지,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마련('17)
-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

□ 비정규직 차별 해소

-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 도입 추진 및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(상시·지속, 생명·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)
-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전면 개편, 1년 미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
-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

□ 양질의 일자리 마련

- 최저임금 1만원 실현('20)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
- 주 52시간 근로 확립('17), 포괄임금제 규제('17)
- 첫 3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('17), 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('18)

2. 공정거래·지배구조·상생협력 외

□ 공정거래

- 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및 법집행 강화('17)
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제강화('17)
 - *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및 분식회계·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
-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, 전속고발제 폐지
-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('18)

□ 상생협력

-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('17, 적합업종 해제품목 중 민생영향이 큰 업종)
- 대·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('17개발, '22까지 200개 기업)
- 사회적경제기본법 법 제정 및 전담조직 구축

□ 지배구조

- 다중대표소송제·전자투표제 도입, 집중투표제 의무화('18)
- 지주회사 규제강화,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,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('17~'18)
-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,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('18)

3. 세 제

-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·초고소득·금융소득 과세 강화
- 상속·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, 과세체계 개편 등 추진
- 대기업 비과세·감면 지속 정비,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
- 지방세 비중 및 규모 확대(국세 대 지방세 비율 단기 7:3, 장기 6:4)

4. 수출·신산업 외

- 중소·중견기업 수출지원강화, 중소·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
-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
- 유턴기업 지원제 개편('18)
-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('17.8)
- 지능정보 핵심기술 R&D,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
-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
- 첨단기술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, 첨단 신소재·부품 개발,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,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
-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,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

5. 환경·에너지

- 1톤 이상 화학물질(7천종)의 정부 등록의무화('30) 및 사전승인제('18)
-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% 이상 강화('18)
-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
 - *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('18),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('19)
- 원전 신규 건설계획(추가 6기) 백지화,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
-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
 - * 에너지세제개편('18), '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' 수정·보완

6. 중소기업

- 중소기업 R&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
- 기업투자촉진법(가칭) 제정,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('22)
-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,200개 육성('22)
-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('18),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
- 근로자와 이익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('17 도입, '22 10만개)
-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('17)
 - *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·영업제한

7. 기 타

- 사전예방 규제행정 도입, 규제 차등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('17)
- '원칙허용 - 예외금지'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('17)
- 도시재생과 연계한 산업단지 혁신 2.0 추진
-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으로 외항선박·연안화물선 총 100척 건조('22)
- 국가필수해운제 도입('19)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